… 한반도에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 · 보호 · 관리하기 위해 우선 우리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힘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도 환경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

집필 : 손기웅(통일연구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지난 2003년부터 통일 · 북한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인터넷에서 공모하여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의 16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의 환경관과 환경정책, 대기 ·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등 실상, 그리고 남북한간의 환경부문 교류협력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모쪼록 이 소책자가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05

Ⅱ. 북한의 환경관과 환경정책 09

1. 환경관
   가. 사회주의사회의 환경관
   나. 북한의 환경관
2. 환경정책
3. 환경기구 · 단체
4. 환경보호구
5. 환경정책의 특징
   가. 경제성
   나. 정치성
   다. 권력세습
   라. 대남선전

Ⅲ. 북한의 환경실상 29

1. 환경문제의 원인
2. 부문별 환경실상
   가. 대기오염
   나. 수질오염
   다. 산림파괴

Ⅳ. 남북한 환경교류협력 49

1. 필요성
2. 교류협력 현황

Ⅴ. 맺는 말 57

[참고문헌]
[부록]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

[표 · 그림] 목 차

[깊이보기] 북한의 '환경' 관련 개념 08

| 표 1 | 북한의 환경정책: 1945~'70년대 준비기 14
| 표 2 | 북한의 환경정책: 1980~현재 제도화기 18
| 표 3 | 북한의 환경관련 기구 · 단체 21
| 표 4 | 북한의 자연보호지역 23
| 표 5 | 동북아지역 국가의 오염집약도 39
| 표 6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지표 남북비교 40
| 표 7 | 북한 주요 수역의 수질현황 43
| 표 8 | 최근 민간단체의 환경분야 주요 대북지원 실적 55

| 그림 * | 북한강유역의 1980년대(좌)및 1990년대(우)토지피복도 46

| 부록 1 | 북한의 「환경보호법」 개정 추이 62
| 부록 2 | 남북한의 환경권 비교 63
| 부록 3 | 남북한간 환경보호관련 합의 63
| 부록 4 | 북한의 환경관련 외국인투자 법규 64
| 부록 5 | 북한의 환경관련 경제특구 법규 65
| 부록 6 | 남북한의 양자간 환경협약 체결현황 66
| 부록 7 | 북한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67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

Ⅰ.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 ● 환경문제는 오늘날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어느 국가도 환경의 오염과 파괴에 의해 비롯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으며, 그것과 결부된 사회적 혼란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이 심각한 상태이다. 환경은 지구상에 인간이 편의로 구분해 놓은 국가 간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좀 더 좋거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인류공동의 과제로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존속이 그것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성숙되고 있으며, 국가 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가고 있다.

북한도 이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환경손상과 공해를 모르는 인민의 지상낙원을 이룩하였다"는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민족 공통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함은 물론, 질적으로 개선하기 하기 위한 노력의 사전작업으로 북한의 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인식에 바탕한 북한의 환경정

책은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환경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떠한 법 · 규정을 마련하였는가? 북한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 파괴의 현황은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등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깊이보기 북한의 '환경' 관련 개념

「환경」(Environment)이라 함은 "인간의 생존과 어떠한 유의미(有意味)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와 조건들의 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환경은 인간의 사회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이라 함은 인간의 자연적 환경만을 의미하는 개념의 사회적 일반성에 비추어, 이하 '환경'이란 단어는 인간의 자연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음은 북한에서 정의되고 있는 「환경」, 「환경오염」, 「환경보호」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개 념	정의내용
환 경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위의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이나 정황
환경오염	환경물질의 농도가 사람들과 동 · 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높아지는 현상
환경보호	인간이 자기의 운명과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인간생활의 물질적 원천인 자연과 인간이 살며 활동하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한편, 불리한 자연환경을 유리한 자연환경으로 개조하는 사업

II. 북한의 환경관과 환경정책

북한의 환경관과 환경정책

1. 환경관

가. 사회주의사회의 환경관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사회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즉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자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산업화와 공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며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해를 주는 여러 가지 공업폐기물과 유해가스, 배기가스와 방사성물질, 각종 소음과 진동 등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과 파괴의 위험은 공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공업이 발전한다고 하여 반드시 있게 되는 동반현상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경제적 부가 극소수의 자본가계급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만 있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사회의 입장이다.

나. 북한의 환경관

북한은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최대이윤과 생산이익이란 관점에서만 환경을 보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며 공해산업도 마구 건설하는 반면에, 공해방지를 비롯한 환경보호사업들은 비생산적인 지출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빚어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보호사업은 단지 선전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본다. 철두철미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이 추진하는 환경보호사업과 관련 법 · 규정의 마련은 사회적 여론과 압력에 못 이겨 채택하는 실현담보가 없는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진정한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인민이 주인이며 국가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봉사되고 있다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에서도 창조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였다는 "북한식 사회주의제도"가 환경보호사업을 철저히 실행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지 있는 환경보호정책"을 이끌었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오늘날 북한은 공해 없고 녹음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되었다고 선전한다.

2. 환경정책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북한 환경정책의 제1기는 해방이후부터 '70년대의 「토지법」(1977)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눈을 뜨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행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인식분야는 주로 농업 · 임업 ·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관련한 것으로 아직 산업화와 공업발전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시기이다.

즉 질(質)적 차원이 아니라, 양(量)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양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추진한 시기이다. 1기는 해방직후부터 전쟁 중의 시기, 2기는 전후 사회주의건설 도입시기, 3기는 「토지」 법채택의 '7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참조).

| 표 1 | 북한의 환경정책 : 1945~'70년대 준비기

시기구분	주요 환경정책	특 징
전쟁기	■ 일제 식민지통치결과 황폐화된 산림의 조성에 의한 홍수피해 방지와 산림 남벌을 방지 ■ 파괴된 도시를 복구 · 건설할 때 공장 및 기업소를 주택구역과 분리하고 강하류 지역에 배치	바위에 좋은 구호를 새기는 것을 장려
'60년대 사회주의 건설 도입기	■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 ■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늘어가자 국토관리사업과 국토건설계획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	전쟁 이후 북한의 건설목표와 관련하여 환경정책을 추진
'70년대 과도기	■ 1976년에 「자연개조 5대방침」(관개사업, 토지정리개량사업, 다락밭건설사업,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치산치수사업, 간석지개발사업)을 채택 ■ 1977년 「토지법」 채택: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하면서 토지의 정리 · 개량 · 보호 · 개간이용을 위한 방향과 대책, 산림조성의 방향과 산림의 보호 · 이용대책, 동 · 식물의 보호대책, 천연기념물보호대책, 수산자원보호대책, 공해현상방지대책 등을 규정 ■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1977), 「경제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1978) 채택	환경이 질적 차원에서 오염 · 파괴되자 주민들내에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사상사업의 강화를 촉구 환경정책을 사회와 자연 전반과 관련하여 총체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된 '70년대는 북한의 환경문제인식과 그 대책이 본격화되는 2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북한 환경정책의 제2기는 「환경보호법」(1986년)이 채택된 '80년대 이후로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우선 '80년대는 「환경보호법」의 채택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북한이 환경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

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던 시기이다. 1986년 환경보호법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토지법」,「인민보건법」,「보물 · 고적 · 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오물청소규칙」등이 환경보호법제로 적용되었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으로는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되는「환경보호법」이외에도 개별 법령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시기는 환경보호에서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요구한 시기인데, 이러한 과학화의 요구는 그동안 국토관리사업의 일부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중운동적 및 양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그 이상의 처방, 즉 질적 차원의 처방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국토관리의 감독과 통제의 수단으로 법 ·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국토관리와 환경정책의 전반에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이 이 시기 환경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에는 환경관련 법 · 규정의 제정이 제도화되고 관련 조직(국토환경보호위원회 → 국토환경보호부 → 국토환경보

호성)이 정비되는 기간이다. 특히 여기에는 '90년대 중반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96년부터는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군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지난해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였다. 또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새롭게 설정하고, 각종 환경관련 행사를 정비하였다.

그런가 하면 「환경보호법」을 1차로 개정하였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서 국가의 역할, 인민의 의무, 반핵주의, 환경정책의 주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7조에서는 "핵무기 ·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의 환경정책도 '9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산림조성에 힘을 쏟아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산림조성 10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산림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카

시아나무 심기를 강조하면서 2001년 10월에는 이를 위해 산림과학원 산하의 경제림연구소에 아카시아나무 연구실을 신설했고, 지속적으로 '산림부문일군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법」을 2차로 개정(2000)하는 등 주요 법·규정을 제·개정하였고, 경제특구관련 법규를 제정하면서 환경보호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0년에 개정된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舊法에 비해 환경보호지도감독기구를 '비상설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승격시키고 있다.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를 보면, "다른 나라의 배 또는 공민이 우리나라의 령역에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배, 공민을 억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벌금을 물린다"(제48조)로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위반자의 경우 舊法에서는 "당연히 억류"하도록 한 규정을 "억류할 수 있는"으로 완화하고 가급적 금전적 배상을 받도록 수정한 것은 국제적인 환경보호법제 수준에 부응하려는 긍정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003년에는 「하천법」을, 2006년에는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다(〈표 2〉 참조).

| 표 2 | 북한의 환경정책: 1980~현재 제도화기

시기구분	주요 환경정책	특 징
'80년대 「환경보호법」 채택기	■ 「국토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84)를 통해 김정일이 환경보호정책의 전면에 등장 ■ 「환경보호법」(1986) 채택: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등 전 5장 52조	국토관리에 대한 법규범이나 규정의 준수를 위해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등 사상교육활동의 강화 요구
'90년대 제도화기	■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 · 규정 마련 ■ 「산림법」 제정(1992) ■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설립(1993): 비상설기구 ■ 국토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김정일이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96)에서 제시 ■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새롭게 설정(1996)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군회의" 개최(1996): 이후 매년 초 개최 ■ "국토환경보호부" 신설(1996): 정무원 공식기구 ■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의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신설(1998) ■ 식수절 변경(1999): 4월 6일 → 3월 2일 ■ 「환경보호법」 1차 개정(1999) ■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을 "도시경영성" 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1999)	1995~6년의 홍수, 한발 등 연이어 닥친 자연재해는 김정일이 환경보호를 포함하는 국토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 「김일성헌법」(1998) 채택: 개정된 헌법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제57조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불인정
최근동향	■ 「산림법 시행규정」 제정(2000) ■ 「환경보호법」 2차 개정(2000) ■ 「국토계획법」 채택(2002) ■ 「하천법」 제정(2003)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2006)	국토관리 상의 주무부서를 국토환경보호기관으로 명시

3. 환경기구 · 단체

환경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북한의 환경행정기구와 관련조직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북한의 문헌과 방송 · 언론을 통해 살펴본 환경보호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환경과 관련된 기구로서 최초로 설립한 것은 1946년 7월 10일에 설립된 정무원 농업위원회 산하의 「기상수문국」이다. 기상수문국은 남한의 「중앙관상대」와 같은 성격의 기구로서 기상 · 수문 · 해양 · 예보, 그리고 오염관측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왔다.

북한이 1992년 6월 리우회의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동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서태평양해양보전계획(NOWPAP) 제2차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명의로 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북한에서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로는 「환경보호 및 토지행정총국」이 있다고 하며, 이 기구는 환경감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993년 2월이다. 국가환경보호위원회는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상의 비상설기구로서 환경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환경보호위원회는 1996년 10월에 정무원 산하의 정식기구인 「국토환경보호부」로 개편되어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되었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이 개정되고 국가권력구조가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행정조직도 정무원 산하의 「국토환경보호부」가 「도시경영부」와 통합되어 내각의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1999년 3월에는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이 다시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되었다. 「국토환경보호성」의 직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기존 「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 직제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90년대에 들어 지방행정경제위원회 산하에도 환경담당 부서를 신설했다. 각 도에는 「환경감독과」를 두었으며, 그 산하에는 각각 지방환경관측 · 감시소와 「도시환경 및 기

상관측소」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앙과 같이 지방의 환경행정조직도 국토관리와 환경관리가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도에는 국토환경보호관리국이, 그리고 시 · 군에는 국토환경보호부가 조직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연구소로는 「환경보호연구소」, 「국토계획연구소」, 「산림과학원」, 「과학원」 등이 있으며, 「조선자연보호연맹」은 북한의 대표적인 자연보호단체이다(〈표 3〉 참조).

| 표 3 | 북한의 환경관련 기구 · 단체

시기구분	주요 환경정책
환경보호 연구소	국토환경보호성 산하의 연구소이다. '60~'70년대 중화학공업단지 및 대규모 산업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1977년 12월 8일 「공해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평양시 모란봉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환경보호연구소는 1990년대 중반 북한당국이 환경오염 방지를 강조하면서 기능이 강화되고 조직도 확대됐다. 대기환경연구실, 물환경연구실, 폐설물자원화연구실, 분석연구실, 환경생태연구실, 생물공학연구실, 토양환경연구실, 지구환경연구실 등 12개의 연구실이 있다고 한다.
국토계획 연구소	국토환경보호성 산하의 연구소이다. 대동강 수자원이용을 포함한 평양시 정비계획, 국토건설총계획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 「육종학연구소」 등 산하의 부문별 연구소를 통해 우량 속성품종의 개발과 재배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01년 10월에는 아카시아나무 번식을 높이기 위해 경제림연구소에 "아카시아나무 연구실"을 신설했다.

과학원	과학원은 과학기술 능력 제고와 과학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내각 산하 국가기관으로 농업과학연구원, 의학과학연구원, 고려의학연구원 등 3개 연구원과 함흥분원, 철도과학분원 등 10개 분원, 그리고 컴퓨터과학연구소, 물리학연구소, 수학연구소 등 2백20여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 타	「동해해양연구소」와 「서해해양연구소」는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 자연보호 연맹	북한의 대표적인 자연보호단체로서 1959년 창립되어 자연보호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대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대중선전 · 교양단체 및 과학지식 보급단체이다. 산하 조직에는 「동물보호협회」, 「식물보호협회」, 「원림보호협회」, 「산림보호협회」, 「수산자원보호협회」, 「대기보호협회」 등 11개 부문별 협회가 있다.

4. 환경보호구

북한의 최초 자연보호지역은 묘향산으로 1954년 4월에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1959년 3월 백두산 · 오가산 · 묘향산 · 금강산 일대, 1976년 구월산 · 칠보산 · 금강산, 1993년 관모봉이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었다.

1995년에는 이들 자연보호지역이 재조정되었으며, 2002년 현재 생물권보호구역 1개소, 자연공원 5개소, 자연보호구 8

개소를 포함하여 동물보호구 8개소, 식물보호구 10개소, 바다새보호구 6개소, 습지보호구 8개소, 해안자원보호구 4개소, 자연경관보호구 13개소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4〉 참조).

198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두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보호사업과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국토환경보호성이 총괄 관리하고 있다.

| 표 4 | 북한의 자연보호지역

구 분	명 칭
생물권 보호구역	백두산(1989)
자연공원	구월산(1995), 금강산(1995), 금송호(1995), 묘향산(1995), 칠보산(1995)
자연보호구	묘향산(1954), 백두산(1959), 구월산(1976), 금강산(1976), 칠보산(1976), 관모봉(1993), 낭림산(1995), 오가산(1995)
동물보호구	동계(1959), 대흥(1959), 금속(1976), 천불(1976), 송원(1993), 청학대(1993), 휘색봉(1993)
식물보호구	맹산흑송(1959), 멸악(1959), 신미도(1959), 장산곶(1959), 덕류산(1976), 수양산(1976), 양덕버섯(1976), 황표만삼(1976), 추애산(1996), 차일봉(1976)

바다새보호구	손봉알섬(1959), 통천알섬(1959), 대감도(1976), 손촌랍도(1976), 운무도(1976), 톡도(1976)
습지보호구 (이주성 조류보호구)	나진만(1995), 문독(1995), 손봉(1995), 신도(1995), 옹진(1995), 용연(1995), 이원만(1995), 청단(1995)
해안자원 보호구	나권 Ear Shell(1996), 나진만(1996), 이원만(1996), Sean Oyster(1996)
경관보호구	덕류산(1995), 서해막(1995), 송원저수호(1995), 송진산(1995), 수풍호(1995), 용문-백룡(1995), 운파호(1995), 원봉호(1995), 위원저수호(1995), 장진강호(1995), 장진호(1995), 태청호(1995), 풍소호(1995)

5. 환경정책의 특징

가. 경제성

북한 환경정책의 특징은 환경보호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경제성과 정치성을 아울러 함축하고 있다는데 있다.

환경정책의 경제성이란 북한이 환경을 보는 기본입장이 환경자원을 보호 · 증식하여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해 활용하려

는 경제적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환경 혹은 환경자원의 생명성을 인식하여 보호하며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부분만을 이용한다는 환경자원에 대한 관리적 자세가 아니라, 환경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보호 · 증식하여 그것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지배적 자세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의 강조는 인간중심적인 환경관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의 사상적 기초는 주체사상이다. 철저한 인간중심의 철학이라 주장하고 있는 소위 주체사상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환경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복과 투쟁의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의 욕구충족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변형과 개조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 정치성

북한 환경정책의 두 번째 큰 특징은 정치적 성격이다. 환경보호를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노력동원의 명분으로 활용하여 건설사업과 대중운동에 인민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사상교육의 강화와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각인시키는 사상교육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제에 대한 충성과 지지가 유도되고, 인민대중에 대한 집단화와 통제가 진행되어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 권력세습

북한의 환경정책은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틀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은 권력의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1980년대에 김정일을 환경보호의 전면에 등장시켜 김일성이 시작한 환경정책을 덕성과 영도력을 구비한 김정일이 과학적 능력으로 계승하고 있어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활용 하였다.

구체적 문건으로는 1984년 11월 19일 전국국토관리부문활동가대회의 참가자에게 보낸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란 편지가 김정일이 환경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계기라고 추정된다. 김정일이 환경분야에 있어서 권력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음은 북한의 영화 「국토건설의 새력

사」와 같은 북한의 방송매체에 의해서도 선전되고 있다.

라. 대남선전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시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환경오염 · 파괴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한에서도 환경오염 · 파괴를 피할 수 없으며, 여기에 더하여 남한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라 환경오염 · 파괴가 극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예지있는 환경보호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공해 없는 인민의 낙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Ⅲ. 북한의 환경실상

북한의 환경실상

● ●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선전되고 있는 북한의 환경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2003년 UNEP와 함께 「북한환경상태보고서 2003」(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환경상태를 평가하여 UNEP에 보고하여 발표한 것으로서 북한 환경현황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의 '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하게 공장과 광

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공장이나 광산들이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지적인 오염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과 광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도 적절한 처리 없이 주변지역에 투기되면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들에 의하면 분뇨를 적절한 처리 없이 농토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에 따른 수질오염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홍수 · 가뭄 · 개간 ·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양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풍부한 생물종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림황폐화 · 토양침식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대도시가 발달하지 않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도시하수 · 생활쓰레기 · 자동차 배기가스 등 생활오염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난 뒤 주요 공장의 가동율이 급격히 떨어져 현재는 대기 · 수질 등의 산업공해가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공해가 주요 문제인데 산업의 가동율이 낮아짐에 따라 오염도가 저하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연료와 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민가 주변 산림의 남벌로 인한 산림파괴의 극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대에 들어 남북경협 등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기존의 산업시설은 노후화되고 에너지 부족 등이 여전하여 가동률이 극히 낮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환경문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산업폐기물 발생 등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가동되는 발전소, 산업시설 등은 기술수준과 이용에너지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해방지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가동이 되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는 심한 대기, 수질오염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되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 정보를 활용하여 북한체제의 진전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 · 파괴의 원인과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문제의 원인

북한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 · 파괴의 원인은 북한 사회체제에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생활에 기본적인 의 · 식 · 주의 해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환경의식을 가질 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환경문제가 정책의 실패와 사회체제 자체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그것이 체제비판운동으로 연결될 것을 두려워 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에 소극적이다. 그 결과 주민들의 환경보호의식과 환경친화적 행태의 일상화는 근원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은 폐쇄적 자립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환경보호적 기술과 인력개발의 국제적 노동분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당국이 생산과 환경보호에서 과학화 · 기술화 · 현대화를 촉구하여도 그것은 근원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구호에 그칠 따름이다.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이룩한 산업의 기계화도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의 내포화로 진전되지 못함으로써 자원낭비적, 에너지비효율적 산업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산업이 군사공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에 치중됨으로써 환경파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체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경제의 운영에 따라 직접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는 사회적 조건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인 동기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호보다 생산할당량의 달성이 강조되어 환경보호가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계획경제체제를 운영함에 따라 환경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이 될 시장기제 및 시장가격기구가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폐쇄적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고수함으로써 비교우위적인 자원의 교환과 활용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유발을 불문하고 국내 자원의 개발과 사용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북한식 폐쇄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운영결과,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력이 약화되어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없고, 환경관리를 위한 관료조직의 탄력성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비환경적인 구조적 문제라 할 것이다.

넷째, 정치 · 군사적 측면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은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자원의 소모와 환경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전군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등의 4대 군사노선은 바로 환경자원의 소모와 환경파괴를 의미한다. 또한 계획량 달성에 모든 정책적 기조가 주어짐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 경제운영 등은 고려될 여지가 없었다.

그 외 김일성부자의 우상화작업,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상징적 조형물 축조, 혁명적인 구호의 바위글 새김과 구호나무의 양산 등도 환경손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

다섯째, 이와같은 환경파괴적 행태와 사회구조는 종국적으로 북한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철저한 인간중심적인 철학이라 강조되는 주체사상은 자연환경을 지배와 투쟁과 정복의 대상으로, 인간에 복무하는 물적 존재로만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환경보호의 의미는 사회

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큼의 환경자원을 이용하는 한편, 환경을 인간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하고 환경을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환경보호란 환경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은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방향을 규율하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 정책수립과 행태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주체사상이 기능하는 한 북한의 환경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사상 · 정책 · 사회구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원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적, 정치 ·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행태적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2. 부문별 환경실상

가. 대기오염

북한의 도시, 특히 중공업도시에서의 공해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해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함흥지구의 대기오염이다.

함흥지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도시로서 그 중에서 70%가 공장지대인 함흥시 흥남구역에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모방직공장 등에서 나오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로 인해 공해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문제를 거의 해마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김일성의 「함경남도 도당위원회와 중요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1979)와 「함경남도 경제사업을 틀어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업」(1980)이란 연설에서 확인될 수 있다.

함흥지구의 공해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지속되고 있음은 "함흥시의 공해현상을 막으려면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공해현상을 막자고 구호나 부르면서 소극적으로 달라붙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마전유원지를 잘 꾸릴데 대하여」(1989)란 그의 글에서 알 수 있다.

공해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현상은 함흥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77년의 「토지법에 대하여」란 글에서 김일성은 청진내륙지역의 주민들이 김책제철소와 청진화학섬유공장 등에서 나오는 매연과 이황화탄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제철, 제련, 화학, 군수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극심하다. 문평제련소와 원산화학공장 등이 위치한 원산에는 아황산가스와 수은연기로 인해 공해현상이 심각하며,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가 있는 송림, 유색금속공업지대인 나진, 자강도의 만포, 강계등 군수공업지대와 탄광지대도 대기오염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한편 북한의 대기오염이 심각함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표 5〉는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의 오염집약도 추정

치를 나타낸 것이다. 오염집약도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국내총생산량(GDP)으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의 경제활동수준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나타낸다. 오염집약도는 환경과 관련한 국민경제의 경제 ·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오염집약도는 SOX가 48.5톤/백만달러, NOX가 17.6톤/백만달러로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CO2 역시 자본주의사회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표 6〉은 남북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치를 비교한 것으로 여기서도 GNP당 배출량에서 북한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5 | 동북아지역 국가의 오염집약도(오염물질배출량/GDP, 1990)

	SOX (t/백만달러)	TSP (t/백만달러)	NOX (t/백만달러)	CO2 (t/천달러)
남 한	6.8	1.8	3.9	0.28
중 국	54.8	57.7	20.2	1.86
일 본	0.4	0.1	0.7	0.10
몽 골	42.5	n.a.	30.4	2.80
북 한	48.5	n.a.	17.6	1.60
미 국	3.9	1.6*	3.7	0.24
세 계	7.3*	5.0*	5.0*	n.a.

* : 1980년대 후반

| 표 6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지표 남북비교

구 분	남한(2004)	북한(2004)	남한 : 북한
GNP	6,824억달러	208억달러	32.8 : 1
인 구	48,138천명	22,928천명	2.1 : 1
에너지소비량	181,363천TOE	15,687천TOE	11.6 :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709천톤	11,483천톤	1 : 3.1
배출량/GNP	0.01kg/달러	0.7kg/달러	1 : 70
1인당 배출량	0.08톤/인	0.52톤/인	1 : 6.5

현재 북한은 에너지 및 경제난으로 인해 공장의 가동율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있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회생하고 공장이 가동되어 주에너지원인 저질의 석탄을 북한이 대량으로 소비할 경우 대기오염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다.

나. 수질오염

공기 외에 물 또한 오염되고 있다. 그 실태 역시 "평양방직 공장에서는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유독성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대동강에 내려보내고 있다. 광산과 공장들에서 강에 유독성물질을 그냥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전에는 옥류교까지 무리를 지어 올라오던 물고기들이 지금은 만경대앞까지 왔다

가는 약냄새를 맡고 다시 바다쪽으로 내려갑니다"(「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63), "탄광, 광산들에서 버럭과 미광을 아무데나 망탕 버리기 때문에 강바닥이 높아지고 강물이 오염되여 물고기가 죽고 있습니다. 청천강바닥이 높아진 것도 조양탄광을 개발하면서 버럭을 망탕 버렸기 때문입니다"(「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978) 등 김일성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북한은 대동강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36mg/l,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8.3mg/l이라면서 대동강의 맑음을 최초로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면서 자랑하였다.

그러나 오수와 하수, 그리고 폐수에 의해 대동강이 오염되었음은 물론이고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에서는 상·하수도 관리문제, 오물처리문제, 공해방지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으나 그 중에서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비판한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1989)라는 김일성의 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수질오염과 더불어 농촌은 물론 도시, 특히 북한이 자랑하는 수도 평양에서 조차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 제일의 철광산이 있는 무산, 그리고 남양, 회령 등과 중국의 도문시 등의 철광산 · 제철소 · 시멘트공장 · 펄프공장, 화학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및 도시폐수로 인해 두만강의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압록강 역시 북한과 중국 양쪽의 탄광과 시멘트공장,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 및 생활폐수에 의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이들 폐수와 유독성물질은 단순히 강과 하천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해양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북한은 1992년 NOWPAP 제2차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해양과 해양생태계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수질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올바른 환경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측의 해양에 생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 조차 부분적인 해양오염과 문제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시인하였고, 함흥과 해주만의 경우 폐기물이 지금까지는 해양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공업화가 진전되고 해양에 물질이 축적되고 생물

학적 집중화가 진행되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표 7〉은 북한 주요수역의 수질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표 7 | 북한 주요 수역의 수질현황

수 역	수질현황
대동강	■ 오수, 분뇨 중 절반정도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입 ■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광경 수시 목격 ■ 수도물을 그대로 마신 주민들의 복통 호소
성천강	■ 함흥의 염료공장, 가죽공장의 폐수와 가정의 생활하수 유입 ■ 회복 불능의 강으로 전락
두만강	■ 무산탄광, 회령제지공장, 중국 개산툰 펄프공장 등으로부터 탄광폐수, 표백제, 생활오수 유입 ■ 심각한 수질오염상황 ■ 수생식물에 심각한 영향 초래
압록강	■ 북한의 혜산, 중강, 만포, 신의주, 중국의 장백, 남강, 집안시, 단동시 등의 산업폐수와 생활오수 유입 ■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한 하천 3급수 이하의 악화된 수질
연·근해 안	■ 동서부의 산업폐수로 연근해안 오염 ■ 남포시 유색금속제련소의 정광 부산물과 제련찌꺼기, 시약배출로 연안오염 심화 ■ 원산 앞바다 5-8월 적조현상 빈발, 어패류 및 해조류 멸종 ■ 서해안 간척사업(황해남도 앞바다 8만정보, 평안남도 앞바다 11만정보를 포함한 총 30만 정보 간척)으로 인한 해양오염 ■ 서해갑문 건설 이후 폐수가 역류, 악취발생, 댐상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부작용 초래

다. 산림파괴

현재 북한의 산림은 광범위한 차원에서 파괴되었다. 김일성이 1947년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란 담화에서 산림조성사업을 강조한 이후 북한은 산림을 남벌하지 말며 조림사업을 적극 벌일 것을 거의 해마다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파괴와 손상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것에 대해 거듭 비판하는 김일성의 연설,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1958),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파괴는 북한주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실패에 의해서도 초래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락밭 건설로 할당된 양의 다락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산림이 조직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이는 김일성이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1989)에서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기로

계획한 것은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들다가는 숱한 땅을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찍어내고 다락밭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다.

북한의 야산 대부분이 민둥산이 된 것은 다락밭 건설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북한주민에게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정책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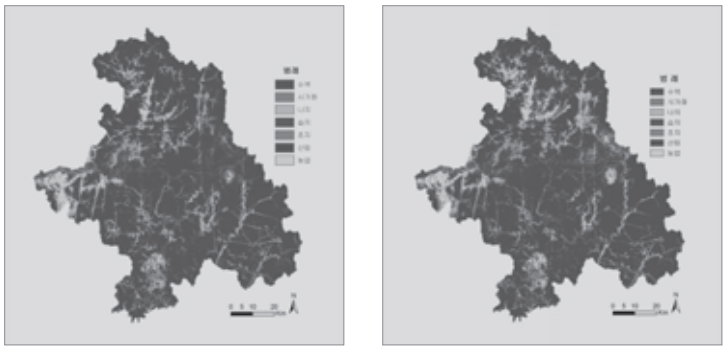
농민에게는 석탄이 거의 공급되지 않아 땔감이 필요하였고, 석탄을 땐다 하더라도 불쏘시개용 장작이 필요하여 농민들은 나무를 찍어 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재난이 산림파괴에 일조를 하였다. 집을 지으려 해도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림법이 엄하여도 산림파괴행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원에 대한 소유의 협동화와 국유화에 의해 주민들이 산림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었고 내 것이 아니란 생각으로 나무를 마구 찍어 썼던 것이다.

식량부족 또한 산림파괴의 큰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화전민이 하는 대로 풀과 나무를 베고 무조건 밭을 만드는, 이른바 뙈기밭을 만들어 옥수수를 심었다. 식량부족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행태를 당국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산림파괴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림 *〉은 1980년대와 '90년대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북한강유역의 토지피복도를 비교한 것이다. 사진 상부의 북한측 북한강 상류지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산림이 2.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 | 북한강유역의 1980년대(좌) 및 1990년대(우) 토지피복도

한편 나무는 정치적으로도 훼손되고 있다. 김일성은 물론 김정일의 위대함을 선전하기 위하여 나무밑줄기의 껍질을 벗겨 충성의 글을 새긴 이른바 「구호나무」가 북한 곳곳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은 물론 북한은 자연의 바위까지 정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IV. 남북한 환경교류협력

남북한 환경교류협력

1. 필요성

북한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에서 환경오염 · 파괴는 사회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현재 사회구조적인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물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개선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가 남북한주민과 그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공통의 유일한 삶의 터전임을 직시한다면,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문화 형성노력은 남북한 모두가 긴급히 대처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다.

따라서 한반도내 바람직한 환경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 내에서 주민들이 환경조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일상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환경분야에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분야는 남북한에 내재한 이념적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 ·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동협력을 통한 접근가능성이 큰 교류협력의 무대가 될 수 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천성이 높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환경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은 정치 · 군사적, 혹은 경제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Zero-Sum"이 아니라 "Positive Sum"분야라는 점이다.

둘째, 한반도의 환경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상호 협력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제고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오는 황사현상이

나 월경성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 문제에서 보듯이 환경문제는 남북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셋째, 환경문제는 향후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할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공동대응은 그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력과 기술력, 체제내적 역량을 비추어 볼 때 환경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에게 필요한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남북한 환경공동체 건설구상'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뿐이다.

또한 북한환경법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개인기업의 공장건설 및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소지가 있지만, 정치·사상적 성격이 적기 때문에 남북한의 환경보호법제는 통일 이후 다른 법률에 비해 통합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2. 교류협력 현황

최근 당국차원에서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주변의 산림실태 및 하천실태조사에 관해 합의하고, 산림복구지원사업을 위한 묘목지원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는 남북 당국차원에서 추진된 최초의 산림복구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민간단체 주도로 산림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한 환경교류협력을 산림 · 수질 · 대기 · 토양 · 생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당국간 직접적인 환경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DMZ인데, 이곳에는 각종 식생물과 야생동물들이 반세기 넘게 보전되어 생태학적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학술적 가치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민통선지구의 동해안쪽 남방지역의 설악산지구는 동해안지구와 함께 하나의 순환형 생태관광권을 형성한다. DMZ지대는 생태계 보전과 평화관광 개발이 상호보완성을 지니는 지역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통일을 전제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지리적 ·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통일 전단계부터 계획하여 시행지역을 한정시켜 국제적인 공동참여가 절실한 실정에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에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한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동일한 생태공간, 생태축으로 연결된 한반도에 있어서 환경문제 해결의 노력이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될 경우, 그 시너지효과를 통해 한반도 환경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남북한간에는 다양한 환경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즉 교류협력은 주로 민간단체 차원의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복구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표 8〉 참조).

또한 '금강산-DMZ 생태관광계획' 내지 '금강산-설악산-민통선지구의 생태관광자원과 공동관리' 등 남북한 공동의 생태자원 보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안들은 세계적인 친환경적 개발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의 평화 · 생태 · 관광사업은 그 자체가 비정치적인 것이고 일반 합작투자사업(제조업)과는 달라 평화와 생태 그리고 경관 관광을 위한 인적교류를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므로 그 어느 경제협력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금강산 지역에 6,400만평 규모의 DMZ 생태연구 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은 처음에는 남북한 사이의 쌍무적 협력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미 · 일 · 중국 등 관심있는 외국을 포함하여 다자간의 콘소시움 방식으로 공동 참여케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표 8 | 최근 민간단체의 환경분야 주요 대북지원 실적

단체명	지 원 실 적
평화의 숲	■ 낙엽송 묘목 25만본, 종자흙떡 163,500개, 종자 50㎏, 기타 양묘용 자재 ■ 솔잎혹파리 방제 관련 자재 및 고성군 양묘장 조성 관련 자재 16종 ■ 태양광 발전설비 및 평양 순안양묘장 조성 관련 자재 ■ 금강산 고성군지역 2차 온실 및 노지양묘장 조성 관련 건설자재
남북 강원도 협력회	■ 솔잎혹파리 및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약품 등 방제 관련 자재 26종 ■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약품 등 방제 관련 자재 10종
대한적십자사	■ 잣나무묘목 30만주

V. 맺는 말

맺는 말

● ● 북한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지도자의 탁월한 영도력에 의해 환경오염과 파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환경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에 의해 공장가동율이 급감함에 따라 현재 북한의 환경문제는 산림파괴를 제외하고는 다소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경제가 회생할 경우 환경보호시설의 부재, 석탄중심의 에너지 사용, 북한식 경제체제 자체에 내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환경문제는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보호의식, 환경보호에 필요한 경제력과 기술력이 결핍된 상황에서 북한자체의 환경보호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을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정복과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주제사상을 북한이 고수하는 한 환경보호에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 · 보호 · 관리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힘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도 환경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남북 쌍방에 확산시켜야 한다.

통일 이후 독일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중의 하나가 환경문제라는 사실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있으며, 그것을 위한

기본바탕이 환경조건의 개선에 있음이 통일로 향하는 도정에 동참하려는 모든 이에게 깊숙히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먼저 환경보호와 관련한 선진기술과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개발도상국인 중국,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 등 국가적 다양성을 지닌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은 역내 환경협력을 위한 중간자,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도정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강광규 · 정회성 · 김미숙 편. 「남북환경포럼자료집 2002; 2003; 2004; 2005」 (서울: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02; 2003; 2004; 2005).
- 김성훈. "금강산 · DMZ · 설악산 無비자 평화관광특구화전망:동북아 생태관광 허브를 지향하며".「DMZ 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자료집」(서울: 환경재단 · 세계평화포럼, 2005년 6월 23일).
- 김일성.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일성.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정일. "평양시를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손기웅.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북한과 사회문화 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 · 양자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손기웅. 「"남북환경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정회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서울: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정회성 외. 「환경친화적 남북 경협시업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03).
- 통일부. 「통일백서 2006」
- 한택환.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 UNEP. 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Pathumthani, Thailand: UNEP, 2003).

부 록

| 부록 1 | 북한의 「환경보호법」 개정 추이

구 분	내 용
「환경보호법」 (1986.4.9)	전 5장 52조. 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2~3장 자연환경의 보존 ·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 4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1차 개정 환경보호법」 (1999.3.4)	전 4장 50조
	1998년의 헌법개정과 1999년 3월의 국토환경보호성 설립에 맞추어 전반적인 지도기관을 정무원에서 내각으로 바꾸었으며,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 관련 모든 업무 및 감독 · 통제를 국토환경보호성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이 담당함을 밝혔다.
	제8조에서 과거의 제8조(“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를 수정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 환경보호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로 함으로써 교류협력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분야의 범위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자국의 경제난 · 환경난을 반영하여 외국과 국제기구들로부터 환경보호관련 과학기술, 재정 등 폭 넓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18조에서 국토환경보호월간, 국토관리총동원월간, 식수 및 도시미화월간을 고정화하여 전 인민대중이 환경보호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며, 내각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국토환경보호사업의 체계적 실시와 인민적 동원을 더욱 강조하였다.
	제42조에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합하는 기술적 과업과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새로이 첨가하였다.
	제44조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꾸준히 촉진하여야 한다고 새로이 규정하여 환경보호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차 개정 환경보호법」 (2000.7.24)	전 4장 50조
	1차 개정 환경법의 2조(“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를 2차 개정법에서는 공산주의를 삭제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수정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북한당국의 목표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 공산주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에도 없음을 고려하여 북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교류협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로동당규약」(1980.10.13)에서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에서 북한지역의 치안유지 등을 담당해 온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한 것과 관련, 윤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21조) 및 방사성물질의 생산 · 공급 · 운반 · 보관 · 사용 · 폐기에 대한 허가(33조) 기관을 “사회안전기관”에서 “인민보안기관”으로 변경시켰다.

| 부록 2 | 남북한의 환경권 비교

구 분	내 용
북한에서의 인권	북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간에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3자는 서로 역사법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항거하는 개인의 방위수단으로서 인권이란 그 개념조차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환경권	북한은 헌법 제57조에서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규정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민을 위해 시혜적 차원에서 건전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줌을 밝히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인민에게 문화위생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이 건전한 환경조성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반사적인 혜택을 입을 따름이다.
남한에서의 환경권	헌법 제3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 부록 3 | 남북한간 환경보호관련 합의

구 분	내 용
「남북 기본합의서」 (1991.12.13)	제3장 남북교류 · 협력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 기술, 교육, 문화 ·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 공동선언」 (2000.6.15)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 부록 4 | 북한의 환경관련 외국인투자 법규

구 분	내 용
「외국인투자법」 (1992.10.5)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11조)
「합영법 시행세칙」 (1992.1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 · 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 불가(5조)
「자유경제 무역지대법」 (1993.1.31)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 · 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13조)
「토지임대법」 (1993.10.2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 (10조) -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5항)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칙」 (1994.3.2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업의 창설을 승인 불가(9조) -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2항)
「자유무역항 규정」 (1994.4.28)	항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불가(24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적용(25조) -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천원까지의 벌금(3항) -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4항) -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물질을 태워 환경오염을 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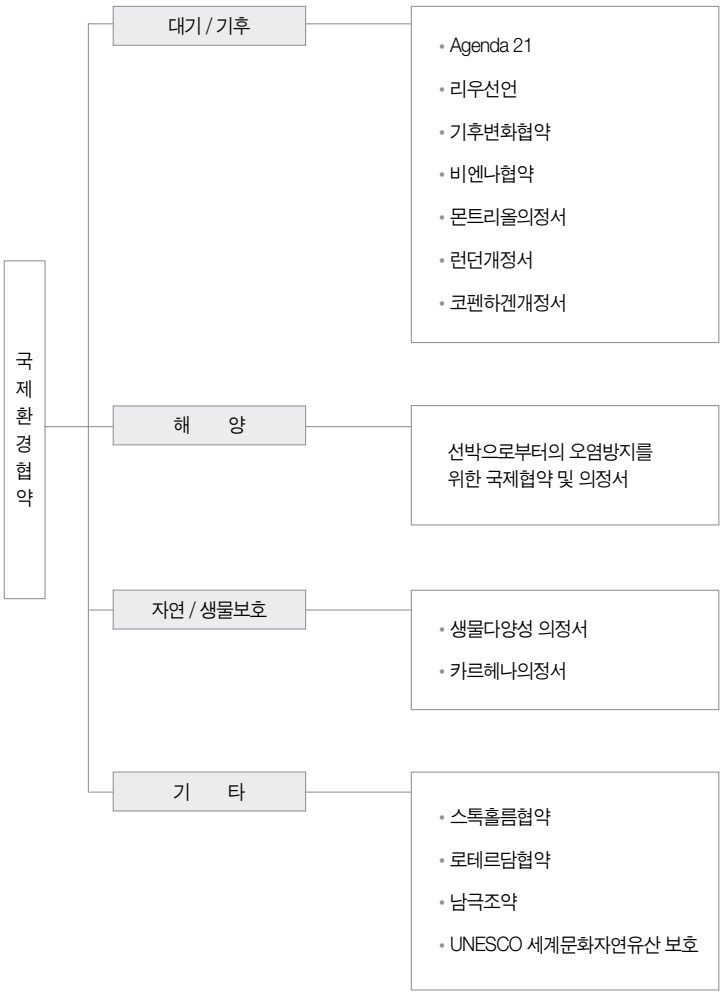
| 부록 5 | 북한의 환경관련 경제특구 법규

구 분	내 용
「라진 · 선봉 경제무역 지대법」 (1993.1.31)	■ 13조 :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러진 대상, 경제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성공업 지구법」 (2002.11.20)	■ 4조 :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 25조 :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2002.11.20)	■ 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 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 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 83조: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3.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환경보호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금강산 관광지구법」 (2002.11.13)	■ 1조: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11조: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 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보장한다. ■ 13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7. 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 14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버림물을 관광화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 19조: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7.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 같은 관광자원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1조: 쏘프트웨어 산업 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 22조: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 부록 6 | 남북한의 양자간 환경협약 체결현황

구 분	조약대상국	조 약 명	체결년도	내 용
북 한	중 국	「두만강 오염방지협정」	1978.3.	두만강 주변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환경보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 및 국토관리총국간의 협력협정」	1992.12.	양국의 환경보호 담당부서간의 환경보호 협력협정
	러시아	「기상수문 및 자연환경분야 협조협정」	1986.10.	-
		「조로공동선언문」	2000.7.	선언적 의미
남 한	중 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1993.10.	양국 정부간 환경보호 협력의 강화
	러시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4.6.	
	일 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1993.6.	

| 부록 7 |　북한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2004.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2)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7)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6)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9)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하였나? (2005.9)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9)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3)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4)
12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수준 (2006.12)
13 북한과학 기술의 이해 (2006.12)
14 북 · 중 국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6.12)
15 알기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2006.12)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

• 인쇄일 2007년 1월 15일
• 발행일 2007년 1월 20일
•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60~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 편집/인쇄처 현프린트 전화 02)2273-7142

〈비매품〉

주 제 가 있 는 통 일 문 제 강 좌 16

… 대립이 지속되는 한 환경파괴적인 군사분야에 대한 인적 · 물적 가치의 배분은 계속 될 것이며, 환경오염 · 파괴가 심화되고 환경개선을 위한 인적 · 물적 투자여력은 감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53-01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